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의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9.1.(화) 동아일보,

- [단독]1조 쏜 ‘국민취업지원’... 42%가 일자리 못 찾아
- 月 60만원 ‘구직수당’ 최대 6개월 지원에도... 취업률은 제자리
- [사설]年 1조 구직수당 수혜자 42%가 백수...‘고용 디딤돌’ 맞나

- ‘한국형 실업부조’로 출발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며 제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- 수당을 받으려면 (중략) 이 때문에 실제 취업은 뒷전이고 수당만 타기 위해 ‘가짜’ 구직 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이 적지 않다.
- 정부는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보다 ‘구직수당’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[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]
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함께 구직기간의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,
 - 취업 지원 외에도 생계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·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제도의 핵심 목표임

[취업 성과 관련]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은 '22년부터 상승세에 있으며
참여자의 취업률은 약 60%에 달하고 있음

* [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] ('22) 54.4% ('23) 59.1% ('24) 59.8% ('25) 59.8%
(기사의 '25년 취업률 58.4%는 잠정치로, 실제 취업률은 59.8%)

- 아울러,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참여자 대비
취업률·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효과는 분명함
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이 미참여자에 비해 5.7%p 높고,
청년 참여자의 취업률은 미참여 청년에 비해 13.9%p 높으며('23, 노동연)
 - 참여자의 임금 상승 순효과는 월 6만원 수준('23, 노동연)

[취업지원 서비스 관련]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,
계획 이행이 증빙되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고,
 - 단순·반복적 이력서 제출, 면접 미응시 등 취업 의사가 없다고 간주
되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감액 및 부지급 등의 조치 중
- 한편, 참여자에 대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위해 심층상담 서비스와 함께
일경험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들을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,
- 청년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'27년부터 K-유스개런티
(청년 첫취업지원제도, 정부안 3,793억원, 16만명 규모)를 신설,
 -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진로 탐색부터 이력서
제출, 면접까지 단계별 특화지원을 강화해 취업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김현아 (044-202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석 (044-202-7193)